

광주시 산하기관장 10명중 6명 관피아·정피아

연봉도 다른 지역보다 높아 재정 악화 부채질

임택 시의원, 민선 3기 이후 분석... "과감한 개혁 필요"

최근 12년 동안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수장과 주요 임원 등을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사실상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의 연봉이 경제 규모가 광주보다 더 큰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높거나 비슷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임택(새정치·동구 1·사진) 의원은 14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33회 제2차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일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함께 탄력적인 연봉 계약 체결 등 광주시 산하 기관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민선 3기(2002년)부터 민선 6기(2014년)까지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대표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모두 54명 중 42.6%인 23명이 공무원 출신이었으며, 정치인 출신은 17%인 9명이었다.

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된 경우는 공사·공단은 6명, 출연기관 10명 등 모두 16명으로 29.6%에 불과했다.

도시공사를 비롯한 공사·공단은 지금까지 총 20명의 대표 중 공무원 출신이 10명인 절반을 차지했고, 전문직 11명(32.4%), 정치인 2명, 시민사회와 언론인 각 1명이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윤 시장의 인사를 포함해 모두 전직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출연기관도 지금까지 34명 중 공무원이

13명(38.2%), 전문직 11명(32.4%), 정치인 7명(20.6%), 언론인 2명(5.9%), 시민사회 1명 등이었다. 그동안 공기업과 출연기관 대표 10명중 6명이 '관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차지한 셈이다.

임 의원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 인사가 비전문가, 관피아, 보은 인사라는 오명에



지적했다.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지방 공기업 대표자 기본급을 비교한 결과 광주 도시공사의 경우 울산과 대전도시공사보

다 800만원~1200만원 더 많았고, 광주도 시철도공사도 대구와 대전보다 900만원~1100만원 높았다.

임 의원은 "고액연봉과 관련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퇴직공무원, 측근 보은 인사로 이뤄지는 대표 선임이라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과감한 조정 등 탄력적 연봉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권일기자 cki@



40일만에 지팡이 짚고 나타난 김정은

1~3면에 김 제1위원장의 위상과학자주택지구 현지시찰 사진을 공개했는데, 신문 1면에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거나 걷는 모습의 사진이 여러 장 실렸다.

온갖 의혹을 잠재우며 40일 만에 등장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습의 사진이 14일 공개됐다. 노동신문은 이날 1~3면에 김 제1위원장의 위상과학자주택지구 현지시찰 사진을 공개했는데, 신문 1면에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거나 걷는 모습의 사진이 여러 장 실렸다. /연합뉴스

광주시 산하기관장 임명 청문회 도입될 듯

윤 시장 "법 테두리내 검토"

민선 6기들어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정에서 즉근·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정환 광주시장이 이르면 내년부터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도입의 뜻을 밝혔다.

윤정환 시장은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임택(새정치·동구 1)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훨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또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 2월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기의 문제인데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답했다.

임 의원은 "시 산하 기관장 인사 청문회

는 인사조례와 무관하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법적 한계에도 경기, 대전, 제주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결심으로 인사청문회가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며 윤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애초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 시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경회 운영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예로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했으며 윤 시장이 최종 결정을 해왔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공기업 4곳과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출연·출자기관 20곳 등 24곳을 운영중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자치구간 체육·문화시설 불균형 심화

박춘수 시의원 시정질의

광주 자치구간 체육시설과 공원, 도서관 등 공공근린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의 자치구간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박춘수(새정치·남구 3·사진) 의원은 14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구 간 공공체육시설의 불균형 배치를 지적하고 자치구별 균등한 체육시설의 확충·배치를 촉구했다.

임택(새정치·동구 1) 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구별 복지, 문화, 체육 등 각종 공공시설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치구별 현황에 따르면 인구대비 문화시설은 동구, 체육시설



은 서구에 밀집해 있는 등 자치구 간 공공·문화 시설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 평균 연령은 광산구 34.2세, 서구 37.2세, 북구 38.1세, 남구 39.5세, 동구 43세다.

문화시설은 동구가 24곳으로 전체 120곳 중 20%를 차지했으며 남구와 광산구는 각 15곳과 16곳에 그쳤다. 시설 1곳당 인구수로 따지면 동구가 4300여명인 반면 광산은 2만5000여명으로 6배나 많았다.

체육시설은 서구가 36곳으로 전체 99곳 중 3분 1 이상을 차지했고 남구는 9곳, 북구 22곳, 광산구 25곳이다.

근린공원은 인구 비율과 비슷했으나 광산이 214곳으로 전체 601곳의 35.6%를 차지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의원님, 바야흐로 벼가 노랗게 익어 수확하는 가을입니다. 요즘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훑힐 자유롭게 사는 이 늙은이는 며칠 전에 북유럽의 한 나라에 간 걸음에 그 나라의 의사당엘 들러보았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라고 깨달은 바가 있어, 삼가 의원님께 몇 가지 소회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한 친지가 어느 선거철에 표를 달라고 구걸하듯 호소하는,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군의원의 후보들에 대하여 "저 사람들 '거지 벼슬아치' 지원자들인데, 그것 너무 갈 때하고 누고 나올 때하고 전혀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웃기는 꼴들이야."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어떤 면은 동의하고 어떤 면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모아 대표로 선출하여 국민의 뜻을 대변하게 하는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면책특권과 회기 내의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한 번 열면 최소한 2억 원 내외의 돈이 들어옵니다. 물가 연동제에 따라 봉급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늙음을 맞이한 저는 연금 한 푼 받지 않고 사는데, 저에게 비한다면, 감히 말하건대 의원님은 현대사회의 황제나 귀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진국 시절이라는 명목으로 해외 여행을 할 경우 그 경비를 국가의 돈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곳 대사관저의 직원들이 직사처럼 모십니다.

국민소득 4만7000불인 덴마크 국회의사당 마당엘 가보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너무 지나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 국회의사당 마당에는 승용차는 한 대도 없고, 자전거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니다. 웬 자전거이냐고 물으니,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좌관도 없고, 비서나 운전기사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하여...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표로 선출된 대개의 의원님들은 민주주의의 본의를 망각하고, 표를 몰아준 순수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배반하고, 자기와 당파의 사사로운 이권을 위해 분투하는 두 얼굴을 가진 자들로 변질되고 주어진 특권을 휘두르지만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정치판에는 기업인들과 마피아처럼 짜고 해먹기가 유행병처럼 번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연구자가 "국민소득 2만6000불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세비(봉급)가 우리 국민소득의 5~6배이고, 선진국 국회의원의 두 배"라고 했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석(호텔침대 분위기가 나는 1등석), 기차의 경우는 특실이 공짜이고, 나라에서 준 돈으로 비서들을 부리고, 가족수당에다 우편 사용료를 받고, 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면서 운전사를 부릅니다.

거기에 명절 때 상여금, 특별활동비까지 합산한다면 연봉이 약 7억7000

입니다.

다만 특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 있는 요원들에게 용역을 주어 조사하고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돈을 타내는 일은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 이야기 듣고 느껴지는 바가 없으십니까? 나라의 빛이 2000조 원에 이르러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국민들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일마 전 보궐선거 때 여당의 한 후보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당선되었는데, 그분은 지금 그 자전거를 내던지고, 고급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좌관과 비서를 부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 있다(衆人皆醉我獨醒)"라는 굴원 비서들을 부리고, 가족수당에다 우편 사용료를 받고, 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면서 운전사를 부립니다. 거기에 명절 때 상여금, 특별활동비까지 합산한다면 연봉이 약 7억7000

<소설가>

공적연금복원은 국민 노후의 삶을 복원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제멋대로 남용되고 낭비되고, 국민 여러분의 연금이 改惡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력들의 선심성, 전시행정 사업에 귀한 세금을 낭비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도 불분명한 해외자원개발에 마구 퍼부어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날려버릴 때도, 국민 여러분의 땅과 세금으로 키워진 알짜배기 공적 자산들이 소위 투자유치니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대재벌과 투기자본들의 손아귀에 헐값에 넘겨지고, '민자유치'라는 이름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터리 사업에 세금 퍼주기가 공공연히 벌어질 때도 침묵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환율방어, 주식시장 방어에 마구 퍼부어지면서 수익을 늘리는커녕 투기자본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면서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데도 방관만 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일상화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너무도 무능했고, 너무도 무책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한 것이 재벌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답뻣값,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서민세금은 마구 올리면서 부자감세로 벌어들인 "전문직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른 채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에게서 받고, 혜택은 기업에게 주고, 책임과 비난은 국정운영 현장 최일선에서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원 노동자 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기업 유보금 470조"
"4대 재벌 자산= 국가 총자산의 1/4"
"30대 재벌 자산= 국가 총자산의 1/3"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
"청년실업자 100만"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세제와 정부재정을 개혁하고 국민연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연금 적자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거꾸로 가는 세금정책과 방만한 세금낭비에 있습니다.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안전하고 안정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 실현에 있고, 복지의 핵심은 연금이며, 연금의 원천은 국민들의 임금과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모든 연금에 세금이 소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받는 연간 수십조의 연금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소비되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자영업, 내수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단순소비성 지출이나 일반적 세금 퍼주기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촉진하며, 세수를 증가시키는 진정한 공적자금이고 국가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최상의 투자인 것입니다.

이런 공적연금에 적자가 생긴 원인은 정부의 주장처럼 복지지출이나 노력충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과격적인 감세 혜택을 준 반면에 소득이 낮은 서민들만 쥐어짜는 거꾸로 가는 세금정책에 있고, 그렇게 걷은 세금조차 써야할 곳에 알뜰하게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여 사상 최대의 국가재정적자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 때문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